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참고자료**	여러분은 든든한 후원자입니다

6.30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.29일(목) 오전 11시부터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6. 28(수)	담당부서	신재생에너지과
담당과장	이진광 과장(044-203-5160)	담 당 자	오종희 사무관(044-203-5171)

2030년까지 전력생산비율의 신재생 20% 달성방안 논의

- 산업부, 「신재생3020 이행계획」 수립을 위한 민·관합동 회의 개최-

□ **(회의개요) 산업통상자원부**는 **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율을 20%까지 공급하기 위한**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**6.29.(목) 석탄회관**에서 **산·관·학·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참여 하에 회의를 가졌다.**

□ **(보급목표 및 여건)** 이번 회의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% 달성을 위해 **'30년까지 53기가와트(GW) 규모의 신규 설비를 보급**해야 하며 **태양광·풍력을 80% 수준으로 보급해 선진국 수준의 믹스를 달성**해야 한다고 보고되었으며,

○ 이는 **현 보급추세**(연평균 1.7GW)**보다 연평균 2기가와트(GW)씩 추가 보급**하는 것으로 획기적 보급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참석자들은 인식을 같이했다.

○ 이를 위해서는 **입지난, 주민민원 등과 같은 만성적인 애로요인을 해결**하기 위한 **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**과 **지자체와 협업이 절실**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.

- **(입지난)** 좁은 국토와 농지 보전정책으로 인해 **개발가능입지가 점차 감소**하여 **개별사업자 중심의 입지발굴 방식은 한계에 직면**하고 있으며, **지자체는 민원을 이유로 입지규제를 신설·강화**하는 등 입지난이 가중됐다.

  * 지자체 이격거리 지침 제정건수(누적) : ('13)1→('14)6→('15)13→('16)51→('17.4)69

(사례) A사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고, 기초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, **도로·주거지역 등과의 500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지침에 부적합**하다며 불허 통보를 받음

- **(주민민원)** 그간 **외지 사업자에 의해 신재생 사업이 추진**되면서 **지역 민원이 빈번**하고, 과도한 보상요구로 **사업자가 직접 민원을 해결**하기에도 **역부족인 상황이다.**

(사례) 경북 소재 00군은 바람이 좋아 그간 풍력발전단지 개발이 활발(343MW 설치 또는 설치예정)하였으나 최근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을 이유로 신규 풍력발전사업 허가 불가입장 발표('17.4)

- **(지자체 허가)** 주민 민원을 이유로 **지자체들이 개발행위허가 등** 신재생 보급 확대를 위한 **인허가에 소극적인 상황이다.**

(사례) B 해상풍력 제어·전기실 건축허가가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('16.3)시 의제로 처리되었으나 00군은 주민반대 여론을 의식하여 건축허가를 계속 보류 중

□ **(논의내용)** 금일 회의에서는 계획입지 도입, 주민참여 활성화, 지자체 보급계획 수립 의무화 등 **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제시**되었고 **민·관이 합심**해서 **보급을 확대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**하기로 했다.

□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**주민수용성 제고와 입지확보 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.**

○ 주민들이 주주 등 **직·간접적으로 신재생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해** 사업 추진이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,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 성공사례 창출·확산하고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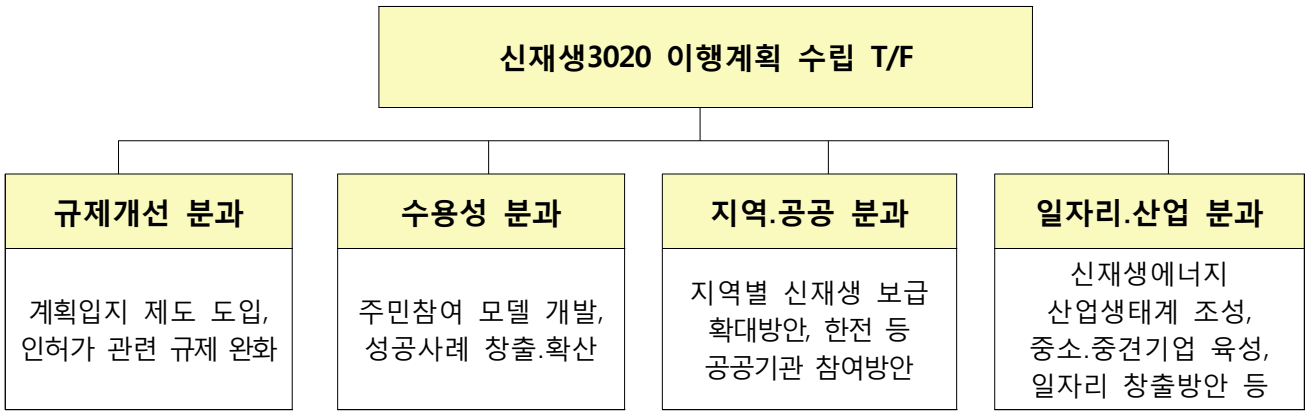
○ 입지확보를 위해 지자체들의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, 신재생에너지 **계획입지제도*를 도입해** 입지·주민수용성 문제 동시 해결해야 한다. * 잔류염분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간척지, 유휴·한계농지 등을 활용

○ 공기업을 중심으로 태양광, 풍력 등 대형 신재생 복합단지와 같은 **대규모사업(메가프로젝트) 활성화하고**

○ 신재생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**기술개발(R&D), 실증, 수요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, 산업생태계 육성 및 수출지원,** 세제 감면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□ **(향후 계획) 규제개선, 수용성, 지역·공공, 일자리·산업 등 4개 이슈별로 분과를 구성·운영**하여 늦어도 8월말까지 신재생 3020 **이행계획을 수립**하기로 했다.

< T/F 구성체계도(안) >

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오종희 사무관(044-203-517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「신재생 3020 이행계획」 민관합동 회의 개최계획

□ 회의개요

○ **(목적)** 신정부 공약('30년까지 발전비율의 20%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) 이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

○ **(시간/장소)** 6.29(목) 14:00~15:30 / 석탄회관 4층 대회의실

○ **(참석)**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, 관련 기관 및 전문가

< 참석자 명단안 >

	성명	소속	직위
1	이수열	농림축산식품부	농지과장(대참)
2	황석태	환경부	환경융합정책국장
3	정의경	국토부	도시정책과장(대참)
4	박종배	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	교수
5	조영탁	한밭대학교 경제학과	교수
6	윤동준	신재생에너지협회	회장
7	손영기	풍력산업협회	회장
8	박주헌	에너지경제연구원	원장
9	황진택	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	원장
10	최태일	한국전력공사	신사업기획처장(대참)
11	이상훈	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	소장
12	홍혜란	에너지시민연대	사무총장
13	고재영	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	소장

○ **(안건)** 신재생 3020 이행계획(안), T/F 운영방안

□ 시간계획

시간		주요내용	비고
14:00~14:10	10'	▪ 인사말씀	실장님
14:10~14:20	10'	▪ 안건 발표 - 신재생 3020 이행계획(안) - T/F 운영방안	신재생에너지과장
14:20~15:30	70'	▪ 안건 토의	T/F 위원